

정부, 여수엑스포 대대적 지원

한총리 등 참석 여수서 첫 회의 국정 주요 과제 선정 집중 관리

정부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국정 주요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 장기적으로 엑스포를 국가 발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나서는 등 엑스포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박람회장 KTX 열차편 투입 등 SOC 확충 ▲정부 지원과제 개발 ▲기반시설 기본설계 등

박람회 사업 지원기반 구축 ▲여수프로젝트 등 대회원국 공약사항 이행 등 4대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또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한편, 부처별 중점 지원계획을 확정해 국가사업으로서의 전방위적

인 박람회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다. 한 총리는 박람회를 세계 최고 수준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개회 계획)과 사후에 박람회 시설을 국제적인 관광·레저·휴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주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장승우 조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박람회 개최 준비상황 ▲BIE 인정신청서 준비사항 ▲회원국 요구사항 및 유치 공약 이행 방안 ▲참가국·관람객 유치계획 등을 보고하고, 부처별 중점 과제를 서둘러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박람회의 법적·재정적 수단, 주제, 개최기간, 사후활용방안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된 BIE 인정신청서를 이날 심의, 다음달 12일까지 BIE 사무국에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여수세계박람회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오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여수

시 신항지구 등에서 개최되고, 개발도상국의 시급한 해양과제를 조사·연구·개발하는 '여수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장 위원장 외에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여수~순천 간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및 철도사업(3천215억원)과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사업(6천189억원)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천313억원 증액하는 등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한편 여수엑스포 개최 준비 지원을 위한 민간 기구인 '별도민지원협의회'가 오는 29일 창립총회와 함께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재희종·박지경 기자 chae@



혁신도시 설명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대상 17개 기관 임직원 30명이 24일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배매산 정상에서 혁신도시 건설 예정 부지를 둘러본 뒤 김좌현(광주시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계장으로부터 혁신도시 조성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혁신도시로 오고 싶어요”

‘민영화 불안’에 韓電 직원 등 입장 큰 변화

“정부가 혁신도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 이전 대상기관들은 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이전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고, 예정대로 이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4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관련 제10차 관계기관 실무회의 참석차 나주에 온 이전 대상 17개 기관 임·직원 30명은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와 달리 담담하게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희망사항임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들은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배매산 정상에 올라 혁신도시 건설 부지를 살펴본 뒤 “환경과 임지면에서 매우 빼어난 곳인 것 같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약속한 대로 쾌적한 주거, 교육, 의료 등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기순 한전 이전총괄팀장은 “정부가 한전을 민영화 대상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분 불안을 우려해 크게 동요하고 있다”며 “대부분 직원들이 민영화보다는 공공기관으로 남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최근 회사내 분위기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이들은 “한전 분사(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나주

社告

제25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오늘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윤탁 교수 '수면과 건강, 잠이 보약이다'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25일(금) '제25회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는 '수면과 건강, 잠이

보약이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윤탁 정신과 교수로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진단,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강좌 내용은 29일(화)자 광주 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수면과 건강, 잠이 보약이다
- 강 사 : 윤탁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국제정신분열병학회(I COSR) 젊은 연구자상 수상
-전남대병원 정신과 교수

- 일 시 : 4월 25일(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이명박 정부 장·차관·靑수석

평균 재산 22억8천만원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청와대 수석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 평균액이 22억8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4면〉
이명박 대통령은 103명의 재산등록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354억7천여만원을 신고했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재산 평균액은 31억3천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새정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 평균액(본인 과 배우자 재산 기준)은 22억8천296만7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의 사회환원을 약속한 이 대통령(신고가액 354억7천401만7천원)을 제외할 경우 고위 공직자 102명의 재산 평균액은 19억5천792만3천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한승수 국무총리의 재산은 21억1천341만원으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16명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과 류우익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 11명의 재산 평균액은 64억5천770여만원이었으며, 이 대통령을 제외할 경우 35억5천61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 총리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의 국무위원 16명의 재산 평균액은 31억3천8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희뉴스



예술꿈나무 큰잔치

호남예술제 개막 ▶일정표 15면

4월 25일~6월 30일

트립 리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